

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방향

2026. 6.

관계부처 합동

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방향(요약)

1. 추진 배경

- 최근 현대전이 'AI 주도의 유·무인 복합 전투체계'로 전환과 민군 기술 협력(Spin-on/off)의 중요성이 부각
 - 미국은 안보·방산에서 시작하여 민간시장까지 확장한 팔란티어* 등 혁신기업이 성장 중이나, 한국은 안보 분야에 스타트업 진입이 미흡
 - * 팔란티어 매출액('25년, 44억달러) : 정부(24억달러, 54%), 민간(20억달러, 46%)
- ⇒ 미래 신안보 후보기업을 발굴하고, 민관협력으로 미래 혁신기업 육성

기대효과 ⇒ 기존 방산 성과에 이어, AI 등 첨단 신안보 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신안보 강국으로 자리매김

* '30년까지 신안보 분야 기업가치 1조원 기업 5개, 매출 1천억원 기업 50개 육성

2. 주요 추진과제 ⇒ 안보·산업 선순환으로 테크 안보 강국 도약

① 미래 신안보산업 및 혁신기업 지정

- (전략분야 지정) Top-down 정부 주도의 수요기반과 Bottom-up 민간 제안 기반을 병행하여 미래 신안보 전략분야를 발굴 및 지정
 - * 무인·자율 및 로봇틱스(중기부, 산업부, 방사청), 초지능·AI 반도체(국방부, 산업부, 방사청), 차세대 국방 센서·미래소재(국방부, 산업부, 과기부), 우주항공 및 유·무인 복합 체계(우주청, 방사청)
- (혁신기업 선정) 우수기업 Pool^{등록} → 후보기업^{지정} → 혁신기업^{지정}
3단계로 전략분야별 혁신기업 발굴 및 육성
 - * (예시) 후보기업 우수기업 Pool + 기업가치 300억원 + 소요 기술역량 + 성장 가능성
혁신기업 후보기업 + 기업가치 1천억원 + 민·군 겸용 기술 보유

② 혁신 소요기반 신속 조달체계 구축

- (한국형 OTA 도입) 혁신기업 기술·제품 신속조달을 위해 구매연계 R&D 확대 및 국가계약법령 개정을 통해 혁신 촉진형 계약(경쟁적 대화) 도입*
- * 혁신기업 가점 부여, 마일스톤 대금 지급, 기업·구매자 책임 면책 등 특례 도입

순 서

I. 추진 배경	1
II. 추진 방향	4
III. 세부 추진과제	5
1. 미래 신안보산업 및 혁신기업 지정	5
2. 혁신 소요기반 신속 조달체계 구축	7
3. 과감한 연구개발 지원 확대	10
4. 전략적 공공투자 기반 구축	11
5. 민·군 범용기술의 신시장 진출 촉진	12
6.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거버넌스 구축	13
IV. 향후 추진계획	14

- (첨단기술 획득제도 개선) 공모형·애자일 획득체계로 전환하여
민간의 첨단기술을 군에 신속히 도입 (첨단전력사업법 제정)
- * 국방첨단전력사업에 참여하는 혁신기업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시 가점 부여 등 검토

③ 과감한 연구개발 지원 확대

- (국방 소요) 기업이 군 작전에 참여하여 필요한 실데이터를 직접 확보하고, 선도연구기관* 등과 협업을 통한 시제품 개발 지원
- * 산학연 협력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한 기관
- (공공 소요) R&D-실증-구매로 이어지는 OTA와 가장 유사한 구매 연계 R&D에 전용 트랙을 신설하여 대규모 지원
- * 구매연계 R&D(현행, 2년 6억원) → 신안보 분야, R&D 20억원/연 + 고도화실증 20억원
- (실증 지원) 개발 기술이 신안보 분야에 빠르게 진출할 수 있도록 실증 지원 전용 트랙을 신설
- * (예시) 드론실증부대(36사단), 양평훈련장 등 활용하여 드론 실증 지원

④ 전략적 공공투자 기반 구축

- 정부가 혁신기업·후보기업의 리스크를 전담하여 직접 투자하는 전문 투자기관 (한국형 IQT) 신설
- * KVIC 자회사로 설립하고, KVIC과 정부(중기부, 방사청 등) 공동 출자
- 중기부방사청의 펀드 출자 예산을 활용하여 '27년 500억원 (중기부방사청 각 250억원) 조성 후, 4년간 매년 추가로 재원 마련 (정부재원 100% 조성)

⑤ 민·군 범용기술의 신시장 진출 촉진

- 정부와 개발기업은 IP를 공동 소유하며, 기업의 민간사업 활용 권한을 인정 (단, 위원회 심의로 예외적 제한)
- 미래전략기술에 대규모·장기 투자할 수 있는 ^{가칭}한국 전략기술 파트너스 설립 및 사업화·상용화, 해외 진출 등 지원

⑥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거버넌스 구축

- 정책 이행을 위한 「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특별법」 제정 추진 ('26년 발의), 혁신기업 육성 위원회(위원장 총리) 및 추진단 설치 등

I. 추진 배경

1. K-방산 현주소

- K-방산은 과거 무기 수입국에서 시작해 독자적인 무기 자체 제작 단계를 거쳐, 현재 체계장비 수출 확대로 '방산 4강'에 진입

* K-방산 세계 순위 및 점유율(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(SIPRI), 단년도)
: ('23) 11위, 2.3% → ('24) 8위, 3.6% → ('25) 4위, 6.0%

** '25년 글로벌 무기 수출시장 점유율(SIPRI, %) : 1위미국(42.0), 2위프랑스(10.0), 3위이스라엘(7.8), 4위한국(6.0), 5위러시아(5.8), 6위이탈리아(5.7), 7위독일(5.1), 8위중국(2.6)

- 자주포, 미사일, 전차 등 방산 대기업의 매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

* 방산 빅4(한화, LGnX1, KAI, 현대로템) 대기업('25) : 매출액 40조 4,526억원, 영업이익 4조 6,324억원(전년비 74% 증가)

- 다만, 기존 체계기업 중심의 방산구조가 지속되어 AI 기반의 혁신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이 미흡

* 중소기업 매출 비중 : 전산업(44.9%), 방산(17.9%)
('23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, '24년 기준 방위산업 실태조사)

2. 현대전의 패러다임 전환

- 최근 러-우 전쟁과 미-이란 중동전쟁을 통해 현대전의 패러다임이 'AI 주도의 유·무인 복합 전투체계'로 전환

- 스타트업 등의 혁신 기술이 결합된 저비용·고효율의 지능형 무기가 전장의 주역이 되고, AI가 '전쟁의 설계자' 역할을 수행

* 약 500달러 수준의 드론이 수백만 달러 가치의 군사장비·시설 파괴

** 이스라엘 '라벤더' 시스템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, 수백 개의 타격 목표를 생성

- 특히, 현대·미래전의 핵심은 '탐지-결심-타격' 구조이며, 기존 방산이 타격 중심이었다면 향후 탐지·결심 분야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

* (탐지) AI 영상·신호 분석, (결심) 데이터 융합, 지휘통제, (타격) 정밀유도무기 등

3. 민간의 혁신기술 활용과 혁신기업 육성 필요성

- 각국은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민간 기술의 군 도입 (Spin-on)과 국방 기술의 산업화 (Spin-off)를 통한 경제 성장 전략을 추진

- 전통적인 국방 기업은 '군 전용' 납품으로 판로가 제한되나, 민간 혁신기업은 민-군 범용성 (Dual-use)을 기반으로 성장 기회가 확대

* 팔란티어 매출액('25년, 44억달러) : 정부(24억달러, 54%), 민간(20억달러, 46%)

⇒ 민간의 혁신 기술이 국가 안보의 중요 기반이 되고, 새로운 안보 기술이 민간 산업의 지형을 바꾸는 기회가 창출

- 미국, 독일은 정부의 장기투자, 데이터 접근, 대규모 정부계약 등을 기반으로 기존의 방산 기업 이외에 팔란티어·헬싱* 등 혁신기업이 성장

* 헬싱('21년 설립) : AI 기반 SW·자율무기·드론 개발, 기업가치 180억 달러(추정)

- 이에 반해, 한국은 방산 등 안보 분야에 신기술 스타트업 진입이 미흡

* '24년 방위산업 참여 529개 업체 중 업력 10년 이내 스타트업은 16개(3%)에 불과

- 안보 기술을 특정기업·국가에 의존하는 경우, 공급망 차단 등 서비스 연속성 저해, 정보유출 및 통제권 약화로 국가안보 위험 증대

⇒ 안보 분야 기술 주권 확립을 위해 미래 신안보 후보기업을 발굴하고, 민관협력으로 미래 혁신기업을 육성

◆ (기대효과) 국가 안보 위상 제고 및 글로벌 방산 시장 선점

- K-팔란티어를 육성하여 체계기업 중심 방산수출을 AI 기반 신안보 수출로 확장 및 글로벌 핵심 플레이어 성장 환경 조성
- 기존 방산 성과에 이어, AI 등 신안보 경쟁력을 더해, 세계 방산 시장에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신안보 강국으로 자리 매김

< 참고 > 해외 안보 혁신기업 사례

구 분	기업 가치	주요 기술	성장 배경
팔란티어 (’03 설립) 	3,280억 달러 (480조원)	- AI 기반 전장정보 분석 플랫폼(Gotham) - 대규모 데이터 통합 및 의사결정 지원 - AI 전장 운영체계(AIP) 구축	- CIA 투자기관인 IQT에서 초기 투자(200만불) - CIA·FBI 분석가와 협업 시제품 개발(Gotham) - 미 국방정보기관 공공조달(ODNI 정식 계약)
앤두릴 (’17 설립) 	600억 달러 (89조원)	- AI 자율 무인기 및 무인 잠수정 기술 - Lattice OS(AI 기반 OS) 자율전투체계 - 실시간 센서융합·표적 추적기술	- 자체 개발 제품을 애자일(Agile)* 방식으로 성능 개선 * 짧은 주기로 개발 반복 수행 - 신속 조달제도(OTA)를 활용하여 계약 체결
헬싱 (’21년 설립) 	180억 달러 (26조원)	- 자율드론·유무인 복합 체계기술 - AI 기반 전장상황 분석 플랫폼 - 다중센서 융합 및 실시간 전장 의사결정 지원	- HW 완제품이 아닌 업데이트가 가능한 SW의 ‘혁신 조항(Innovation Clause)’ 계약 체결 - 장기간 반복 구매가 가능한 프레임워크(Framework) 계약 및 납품
미자르 비전 (’21년 설립) 	미공개 (비상장)	- AI 기반 위성영상 분석 및 객체 탐지 기술 - 군용 항공기·함정·방공 체계 자동 식별 기능 - 실시간 지리공간정보 플랫폼 구축	- 군민융합 정책 펀드* 등을 통한 범용 기술개발을 통해 성장 * 민간 혁신을 군사 분야에 응용 (’25년 약 13조 규모 펀드 조성)

II. 추진 방향

비전

안보·산업 선순환으로 테크 안보 강국 도약

목표

- ▶ 신안보 분야 기업가치 1조원 기업 5개 육성(~30년)
- ▶ 신안보 매출 1천억 혁신기업 50개 육성(~30년)

기업 발굴	1. 미래 신안보산업 및 혁신기업 지정	▶ 미래 신안보산업 전략분야 지정 ▶ 미래 신안보 혁신·후보기업 지정
첨단 기술 획득	2. 혁신 소요기반 신속 조달체계 구축	▶ 한국형 OTA 도입 ▶ 첨단기술형 획득제도 개선
	3. 과감한 연구개발 지원 확대	▶ 국방·공공 소요 맞춤 R&D 지원 ▶ 실증 지원, 석박사급 연구인력 지원
기업 성장 지원	4. 전략적 공공투자 기반 구축	▶ 전문 투자기관(한국형 IQT) 신설 ▶ 단계별 투자 체계 구축(초기, 후속)
	5. 민·군 범용기술 신시장 진출 촉진	▶ 지재권 보장, 1조원 이상 펀드 조성 ▶ 사업화·상용화, 대기업 협업 해외 진출

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거버넌스 구축

- ▶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특별법 제정
- ▶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위원회 및 추진단 구축

Ⅲ. 세부 추진과제

1 미래 신안보산업 및 혁신기업 지정

□ 미래 신안보산업 전략분야 지정

- (Top-down) 현재 안보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신기술 도입이 시급한 전략분야는 소관 부처*에서 제안
- * 중기부, 국방부, 산업부, 국정원, 방사청, 우주청 등 관계부처 소요 제기
- (Bottom-up) 급변하는 기술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·기업이 제안한 혁신 기술분야를 소관부처 검토를 통해 발굴

□ 혁신기업 강점 기술 현황

※ 관계부처 제안 및 혁신기업의 경쟁력 분야 등을 고려하여 기술분야 도출

① 무인·자율 및 로봇틱스(중기부, 산업부, 방사청)

- (지능형 드론) AI 기반 자율 표적 식별, 다수 무인기 협업 타격 체계
- (다목적 자율 로봇) 험지 기동형 수색·운반·위험물 제거 임무 하드웨어

② 초지능 및 AI 반도체(국방부, 산업부, 방사청)

- (국방 AI 체계) 전장 빅데이터 분석 기반 초고속 의사결정 시스템 등
- (국방 전용 AI 반도체) 무기체계 탑재용 저전력·고성능 온디바이스 칩

③ 차세대 국방 센서 및 미래소재(국방부, 산업부, 과기부)

- (초소형 레이더·광학 센서) 소형 드론 포착의 정밀 센서 등 탐지망 구축
- (극한 환경 신소재) 극초음속 비행 시의 초고열·고충격을 극복하는 특수 소재 등 미래형 무기체계 활용 소재 개발

④ 우주·항공 및 유·무인 복합 체계(우주청, 방사청)

- (초소형 위성망) 저궤도 위성 배치를 통한 24시간 상시 감시 및 통신망
- (무인 항공 플랫폼) 스텔스 기술 및 유·무인 복합 장비(MUM-T) 운용 등

⑤ 사이버 보안 및 양자 암호 기술(국정원, 과기부)

- (능동형 사이버 보안)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 구축 및 양자 내성 암호체계
- (양자 통신·컴퓨팅) 도청 불가능 통신 및 초고속 암호 해독 기술 등

□ 전략분야별 혁신기업 및 후보기업(중소중견기업) 선정

- (운영체계) 3단계 체계 (우수기업 Pool^{등록} → 후보기업^{지정} → 혁신기업^{지정})로 운영하여 전략분야별 혁신기업 발굴 및 육성
- (지정기준) 우수기업Pool은 부처별 추천기업*을 리스트화하여 등록·관리하며, 혁신기업과 후보기업은 혁신성·성장성을 검증**

* 모두의 챌린지 방산 선정기업, 분야별 공공인증 기술제품 인증기업, 방산혁신기업 등

** (예시) 후보기업 우수기업 Pool + 기업가치 300억원 + 소요 기술역량 + 성장 가능성
혁신기업 후보기업 + 기업가치 1천억원 + 만군 겸용 기술 보유

※ 공공투자(한국형 IQT) 기업은 후보기업으로 즉시 지정

- (평가방법) 관계부처·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종합 평가

* (예시) 방산 관련 기술 : 기술력(인증), 군 활용성 등

- (사후관리) 후보기업은 3년 주기로 재평가하고, 혁신기업은 성장 성과 및 지원 필요성 등을 검토(심의위)하여 최대 5년 지정(3년 후 평가 + 2년)

< 혁신기업·후보기업 선정 방안(안) >

우수기업 Pool 등록	후보기업 지정	혁신기업 지정
■ (기준) 전략분야에 관련 기술·경험 보유 기업 * 벤처기업, 방산혁신기업, 방산업체, DQ인증기업 등 ■ (등록) 부처별 추천 및 등록	■ (기준) 우수기업 Pool + 기업가치 300억원 + 소요 기술역량 등 * 기존 이외 공공투자(한국형 IQT) 지원기업 등 즉시 지정 ■ (지정) 기업신청(우수기업 Pool) → 검증 및 지정 ■ (기간) 지정 3년 후 재평가	■ (기준) 후보기업 + 기업가치 1천억원 + 만군 겸용 기술 ■ (지정) 기업신청(후보기업) → 검증 및 지정 ■ (기간) 3년 후 평가 + 2년

⇒ 전략분야 선정 및 혁신기업·후보기업 지정은 범부처 컨트롤 타워(가칭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위원회)에서 최종 결정

2 혁신 소요기반 신속 조달체계 구축

- 한국형 OTA(Other Transaction Authority) 도입 (재경부, 중기부 등)
 - (제도 개요) 신안보 관련 혁신기업의 제품·기술이 빠르게 계약·실증·구매로 연결되는 조달체계 구축
 - * 기업 아이디어 제안 + 부처 소요 → 정부 투자 및 R&D 수행 → 성공 시 즉시 구매
 - ** 재경부, 중기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국가계약법령 등 개정
 - (운영 방안) 혁신기업의 기술·제품에 대한 수요가 사전에 확정된 경우
 - ① 수의계약 또는 ② 혁신 촉진형 계약(경쟁적 대화) 도입을 통해 신속 구매 추진
 - ① 수의계약이 가능한 혁신제품과 구매조건부 R&D 확대
 - ② 복수업체와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목표물 도출 및 계약자 선정·구매로 이어지는 방식
 - 신안보 전략분야의 혁신기업이 ‘혁신 촉진형 계약’을 통해 입찰 시 차등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
 - 혁신기업이 특수 기술·수행능력 등 일정요건 충족 시, 제한경쟁 방식으로 계약대상자 선발
 - * (예시) 수요기관의 특수한 성능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·용역계약 등
 - 입찰을 거쳐 선정된 업체의 시제품이 당초 설정한 목표 수준을 달성하면, 보안·기술유지·우선권 보장 등을 위한 수의계약 체결
 - 기타 마일스톤 방식 대금지급, 기업·구매자 책임 면책, IP 소유권 보장, 예정가격 산정 유연화 등 추진
- 첨단기술형 획득제도 개선 (국방부, 방사청)
 - * 첨단전력의 신속한 획득을 위한 「국방첨단전력사업법」 제정
 - 공모형 획득 방식을 통해 민간의 첨단기술을 군에 신속히 도입
 - * (현행) 군이 정량적 성능·제원 제시 → (개선) 민간에서 군사적·산업적 필요성 제시
 - 군 요구 사항 100% 충족 시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 방식을 군이 우선 사용하면서 점차 성능을 개선하는 진화적 애자일 방식*으로 전환
 - * 초기 버전을 빠르게 전력화하고 짧은 주기로 실증-평가-개발 반복 수행
 - ※ 국방첨단전력사업에 참여하는 혁신기업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시 가점 부여 등

국방드론 도입 확대 · 신속 추진 방안

1. 국방드론 도입 추진현황

- (과거) 중대형·정찰용 무인기를 중심으로 기술 고도화 및 도입에 집중
 - * 세계적 수준의 국산 중고도정찰무인기 (MUAV, '26. 4월 1호기 출고) 올해 첫 전력화 예정
- (현재) 민간의 소형드론 기술 발전, 러-우 전쟁 이후 드론戰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소형 정찰·공격용 드론 도입 확대 중
 - * 소형정찰·공격드론 등 32종 4,300여대를 운용 중이며, 34종 2,800여대의 드론 도입 추진 중
 - * 소형드론에 대한 군 교육훈련 기회 확대 및 소요 창출을 위해 국내·외 드론 신속 구매

2. 향후 드론 신속 도입 및 확대방안

① 소형 드론 조기 확보

- (임무 및 운용부대 다양화) 군집형, 소부대, 시가전 등 다양한 임무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해 기능이 향상된 소형드론 도입 추진
 - AI 탑재 군집드론 도입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및 사업타당성 조사 병행 추진 중
 - 소부대 타격 및 정찰능력 보강을 위한 1.8만여대의 드론* 소요 기획 중
 - * 초소형정찰드론, 분대급소형대인자폭드론, 소형대인·대장갑자폭드론 등
- ↳ 한국형 저가형 자폭드론(Low-cost Uncrewed Combat Attack System)
- (K-LUCAS) 적의 이동형 미사일 발사차량(TEL)의 공격 등 킬체인 전력을 보완하는 저비용 고효율 자폭드론을 단기간 대량 확보
 - * 현재 핵심기술 개발간 시험비행 중으로 '27년부터 시제기 시범운영 예정
- 공통플랫폼, 모듈화를 통해 임무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하고, 엔진 등 주요부품 국산화를 통해 저비용·대량생산 기반 마련

② 「50만 드론전사 양성」 추진

- 군이 국산 상용드론에 대한 대규모의 공공수요를 창출하여, 국내 드론 산업 활성화 및 국산화 촉진 등 드론생태계의 마중물 역할
 - 교육용 드론을 '26년 1.1만여대, '27년부터 매년 1.7만여대 지속 도입
 - 복수낙찰제를 적용하여 다수업체 참여를 유도하고, 국산화 가이드라인을 제정('25.12월)하여 입찰 희망업체 (14개) 대상 국산화 검증 중

③ 민간드론 실증

- 드론을 군이 직접 운용하여 現 기술 수준을 확인하고, 무기체계로 소요 제기하여 첨단전력을 신속히 공급하는 등 실증 강화
 - 드론공방전 최초 개최('26년), 드론 전담부대 운영 등을 통해 민간제품에 대한 군 실증을 강화하고, 드론 실증장비 구매 등의 예산 확대
 - 국토부의 「드론 5대 완성체 프로젝트」사업 결과물 등 군 임무와 연계해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다부처 실증 협력 강화
 -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대상 군 실증지원 예산을 확대하고, 군 운용 경험 및 실증결과를 피드백하여 기업의 기술발전 지원

3. 드론 신속도입을 위한 제도 혁신

① 첨단전력 획득체계 개선

- AI, 드론, 로봇 등 첨단전력은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를 구분 없이, 유연하고 신속한 도입이 가능한 「국방첨단전력사업법」 제정 추진('26년)
 - * (미국 사례) 드론을 소모품으로 보고 저가형 드론을 대량 확보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고, 중소기업 등의 참여를 확대하여 산업생태계를 확장
 - (유연한 요구성능) 임무 중심의 요구성능을 설정하고, 업체와의 경쟁적 대화를 통해 최적의 사업추진방안 도출
 - * 혁신성·품질 등이 인정된 제품은 소요결정후 바로 구매하고, 최초 배치 후 운용경험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성능 개선
 - (예산확보) 사업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고, 결정된 소요에 대한 적정 규모의 별도예산을 배정하여 예산편성 소요기간 단축
 - (방위사업 계약특례 활용) 성능·운용 적합성이 검증된 경우, 후속물량에 대한 계속계약 또는 수의 계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획득기간 단축

② 드론 공급망 체계 혁신

- 드론의 신속·대량 획득을 위해 드론 공급망 체계 전반을 혁신
 - (모듈화) 드론 탄약을 별도 모듈로 개발하여 드론의 신속·대량 획득
 - * 드론본체와 탄약을 분리 획득함으로써 드론 전문기업의 드론 개발역량 집중여건 마련
 - (표준화) 대량생산과 부품 호환을 위해 배터리, 통신규격 등 표준화
 - (인증·조달) 국산화 드론 인증체계 및 온라인 장터 구축 등 추진
 - (국제협력) 美국방드론 장터 한국제품 등록, 한미 공통 표준·인증체계 구축

3 과감한 연구개발 지원 확대

□ (국방 소요) 국방 R&D 활용, 혁신기업·후보기업에 연계 지원(국방부, 방사청)

- (데이터 확보) 기업이 군 작전(훈련)에 참여하여 필요한 실데이터를 직접 확보하고, 현장의견을 반영한 기술력 확보 지원
 - * 군산학 협력센터, 국방데이터 안심존 등에서 군 핵심 데이터를 우선 접근·활용 지원
- (국방혁신랩) 첨단분야 선도연구기관*과 국방혁신랩** 컨소시엄 구성 시, 혁신기업·후보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엄에 가점 부여
 - * 산학연 협력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한 기관
 - ** 과제당 약 200억원 지원하여 체계수준의 시제품 개발 지원

□ (공공 소요) 비 국방분야 수요기반* 및 고위험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R&D 자금을 집중 지원(중기부, 산업부, 우주청 등)

* 부처(국정원, 우주청, 경찰청, 해경청 등), 민간 소요 등의 연구개발

- (OTA형 R&D) R&D-실증-구매로 이어지는 OTA와 가장 유사한 구매 연계 R&D에 전용 트랙을 신설하여 대규모 지원(중기부)
 - 민군 Dual-use와 빠른 안보분야 적용, 신속한 시장진출을 위해 무빙 타겟(개발목표 변경)을 허용하고, 2단계(R&D→고도화실증) 대폭 지원
 - * 구매연계 R&D(현행, 2년 6억원) → 신안보 분야, R&D 20억원/연 + 고도화실증 20억원

□ (실증 지원) 혁신기업·후보기업의 개발 기술이 신안보 분야에 빠르게 진출할 수 있도록 실증 지원 전용 트랙을 신설(중기부)

* 기술사업화 패키지사업 내 안보 분야 실증 전용 트랙 신설

- 혁신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제공(국방부, 방사청)
 - * (예시) 드론실증부대(36사단), 양평훈련장 등 활용하여 드론 실증 지원

□ (연구인력) 혁신기업·후보기업에게 석박사급 우수 연구인력 채용지원*을 확대하여 R&D 역량 강화(중기부)

* (현행) 일반 중소기업 최대 5천만원 → (확대) 혁신기업·후보기업 최대 1억원

4 전략적 공공투자 기반 구축

□ '전문 투자기관(한국형 IQT)' 신설 (중기부, 방사청 등)

- (목적) 전략분야별 필요로 하는 신기술·핵심기술을 보유한 혁신기업·후보기업에 정부가 리스크를 전담하여 직접 투자

※ (참고) 美 IQT 개요

비영리 VC인 In-Q-Tel(IQT, 100% 정부예산)은 조달 이전 단계부터 유망기업에 투자하고, 정부 수요 기반으로 성장을 지원

- (설립) 한국벤처투자(KVIC) 자회사 형태로 설립하고, 한국벤처투자 이외 국방부, 방사청 등 관계기관이 공동 출자
 - * 투자기관·펀드 관련 정보 비공개, 기관 임직원의 비밀유지 의무, 외국인·복수국적자 임직원 선임 제한 등 법적근거 마련
- (재원) 중기부·방사청의 펀드 출자 예산을 활용하여 '27년 500억원 조성 후, 4년간 매년 추가로 재원 마련 (정부재원 100% 조성)*
 - * ('27) 중기부·방사청 각 250억원
- (투자) 정부와 전문 투자기관이 출자하여 펀드를 조성하고, 민·관 합동 투자결정 기구를 설치하여 혁신기업·후보기업에 투자
 - * 펀드 출자자 구성 : 정부 100% (전문 투자기관 1% 포함)
 - ** 투자 회수금 배분은 펀드 지분율에 따라 결정하고, 정부투자 회수금은 100% 재투자

□ 단계별 투자 체계를 구축하여 리스크 최소화 및 안정적 기술개발 지원

- (초기투자) 혁신기업·후보기업의 기술개발 초기 자금공백을 해소하고, 기술개발 완료까지 자금을 지원
- (후속투자) 기술개발 완료 후에 실증 테스트, 보안 분야 적용 등을 위해 추가로 자금을 투입
 - 필요시 방산 정책펀드*와 연계하여 후속 투자금 확충
 - * 방산기술혁신펀드('26~'28, 3.1천억원, 방산 R&D 예치은행)

※ 보안수준, 민간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민간 VC와 공동 투자 검토(필요시)

5 민간 범용기술의 신시장 진출 촉진

□ (지재권 보장) 정부와 개발기업은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며, 기업의 민간사업 활용 권한을 인정 (단, 위원회 심의로 예외적 제한)

* NASA와 美 국방부는 스페이스X와 OTA를 통해 핵심 기술인 '로켓 수직 이착륙 및 재사용 기술'에 대한 지식재산권(IP)을 기업이 온전히 보유하도록 허용

□ (사업화·상용화) 성장 도약을 위한 사업화·상용화 지원 (중기부, 국방부)

- 혁신기업·후보기업의 자체 스케일업 계획에 따라 전략수립, 기술 사업화 등의 패키지 지원 신설 (중기부)
 - * 최대 5년/기업당 10억원, 자부담 50% / 스케일업 서포터 구성 및 1:1 맞춤형 지원
- AX 스프린트 사업 (상용화 사업) 내 전용트랙을 신설하여 혁신기업·후보기업의 AX 사업 참여 보장 및 전 군 확대 사업 참여 지원 (국방부)

□ (투자) 정책펀드를 활용하여 대규모 자금 지원 (중기부, 금융위 등)

- 모태펀드 출자 펀드, 방산 정책펀드 등 1조원 이상 규모 펀드 조성
 - * 신설 방산 스타트업 펀드('27~'30, 5천억원, 중기부 모태펀드 활용), K-방산수출펀드('26~'27, 1.6천억원, 방사청), 방산기술혁신펀드('26~'28, 3.1천억원, 방산 R&D 예치은행)
- 민·관 자금이 신안보 분야 등 미래전략기술에 대규모·장기 투자될 수 있도록 특화된 운용사인 「가칭 한국 전략기술 파트너스」 설립 지원 (금융위)
 - ①미래원천기술, ②주력산업 부품소재 핵심기술의 R&D, 상용화, 관련 M&A를 통한 글로벌 IP 확보 등에 향후 5년간 최대 10조원 투입

※ 중진공, 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의 대출·보증 우대 지원 (중기부 등)

□ (수출 확대) 혁신기업·후보기업의 자체 수출역량을 강화하고, 대기업 협업으로 글로벌시장 진출 촉진 (중기부, 방사청)

- (수출바우처) 수출 전 과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패키지식*으로 지원
 - * 디자인 개발, 바이어 발굴, 인증 등 서비스 지원(최대 1억원, 자부담 50%~30%)
- (대기업 협업) 국내 국방 대기업과 혁신기업·후보기업이 함께 해외 수요처 발굴(예 : 방산챌린지) 및 제품 현지화 등 판로개척 활동 지원*
 - * 지원규모 상향 : (기업당) 3천만원 → 5천만원, (컨소시엄) 기업당 1~5천만원 → 방산1억원

6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거버넌스 구축

□ 정책 이행을 위한 「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특별법」 마련 (중기부)

- 전문 투자기관 신설 (한국형 IQT), 위원회 및 추진단 설치*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('26년 발의)

* cf. '20.3월 소부장 특별법 제정 → 소부장 위원회 및 추진단 설치

< 「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특별법」 주요 구성(안) >

1. 지원대상(신안보 분야, 기업), 2. 혁신기업·후보기업 지정, 3. 위원회 등 운영체계, 4. 지원계획 수립, 5. 지원내용 및 특례, 6. 펀드 조성 및 운영, 7. 비밀엄수, 8. 벌칙조항

□ 혁신기업 및 후보기업 지정 등을 심의 하는 범부처 '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위원회' 설립 (부처 합동)

- 국무총리 회의체로 설치하고, 혁신기업·후보기업 선정, 관계부처·기관 연계 지원 등 심의

* 간사 :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복수 지정

< 위원회·추진단 구축(안) >

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위원회
(위원장 : 국무총리
부위원장 : 중기부·국방부 장관)

심의위원회
(관계부처전문가 구성, 자문/평가/심의 등)

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추진단
(관계부처 합동, 중기부 내에 설치)

□ 관계부처 합동 '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추진단*' 설치 (관계부처)

* 추진단 인력은 중기부와 관계부처 파견인력으로 활용

** 정책수립, 전주기 연계 지원체계 구축 (기업발굴 → 투자R&D → 실증 → 조달·시장진출)

- 추진단 설치 이전에 '임시 TF(6명)' 운영 (중기부)

□ 국방 관련 예산 통합 관리 (기획처, 관계부처)

-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과 관련된 전용사업 및 타 사업내 전용 트랙 예산은 국방예산으로 분류·관리

* '27년 소요예산 검토 시, 기획처 등 관계부처와 국방 관련 예산관리 방안 마련

- 각 부처 제안을 토대로 추진단이 기획처와 협의

IV. 향후 추진계획

□ ('26.하) 「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특별법」 제정 및 거버넌스를 구축 하고, 신안보 혁신기업·후보기업 지정제도를 운영

□ ('27년) 관련 법령 제·개정 기반으로 한국형 OTA 도입, 전문 투자기관 신설, 맞춤형 R&D 지원 등 대책 이행을 본격 추진

< 주요 과제별 추진 일정(안) >

주요 과제	일정	부처
1. 미래 신안보산업 및 혁신기업 지정		
① 미래 신안보산업 전략분야 지정	'26.하	중기부, 국방부, 국정원, 방사청 등
②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및 후보기업 지정	'26.하	중기부, 방사청 등
2 혁신 소요기반 신속 조달체계 구축		
① 한국형 OTA 도입	'27.상	재경부, 중기부 등
② 첨단기술 획득제도 개선	'26.상	국방부, 방사청
3. 과감한 연구개발 지원 확대		
① (국방소요) 국방 R&D 연계 지원	'27.1월	국방부, 방사청
② (공공소요) OTA형 R&D, 맞춤 R&D	'27.1월	중기부, 산업부, 우주청 등
③ (공통) 실증 지원, 연구인력 채용 지원	'27.1월	중기부, 국방부 등
4. 전략적 공공투자 기반구축		
① 전문 투자기관 (한국형 IQT) 신설	'27.상	중기부, 방사청 등
5. 민·군 범용기술의 신시장 진출 촉진		
① 지재권 보장	'27.상	중기부, 방사청
② 사업화·상용화 지원	'27.1월	중기부, 국방부
③ 1조원 규모 펀드 조성, 정책금융 우대	'27.1월	중기부, 금융위 등
④ 수출바우처, 대기업 협업 해외판로 지원	'27.1월	중기부, 방사청
6.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거버넌스 구축		
① 「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특별법」 제정 * 국방첨단전략사업법 제정(국방부, 방사청), 국가계약법령 개정(재경부)	'26.하	중기부
② 「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위원회」 및 추진단 설치	'26.하	관계부처
③ 국방예산 분류·관리	'26.하	기획처, 관계부처